



보도시점 2025. 8. 5.(화) 13:30 배포 2025. 8. 5.(화) 09:00

“기업이 진짜성장의 중심”

- 경제 6단체와 함께 「성장전략 TF」 1차 회의 개최
- 「성장전략 TF」를 통해 AI로봇 등 초혁신경제 품목을 선정하고 민간·정부·전문가 등 총력 대응하여 성과달성 추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대폭 전환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8.5일(화) 13:30에 개최하였다.

<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25.8.5.(화) 13:30~15:00,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
- ▶ (참석자)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무·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성장수석
민간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붙임1)이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붙임2)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하였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붙임3)이다. 먼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R&D·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1) 「성장전략 TF」 운영계획

(붙임2)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붙임3)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10)
		담당자	서기관	전성준	(sungking86@korea.kr)
			사무관	하형철	(hhc33@korea.kr)
			사무관	안영신	(justice6589@korea.kr)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박헌진	(044-215-4630)
		담당자	사무관	박성우	(psw4512@korea.kr)
		담당자	주무관	전익수	(iksu1701@korea.kr)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	책임자	팀 장	최성영	(044-215-4581)
		담당자	사무관	홍권일	(97kwonil@korea.kr)
		담당자	주무관	송동준	(dj265@korea.kr)
담당 부서 (협조)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서기관	정지선	(jisunjeong@korea.kr)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현수	(02-6050-3442)
		담당자	과 장	이동찬	(dclee@korcham.net)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실	책임자	실 장	설송이	(02-6000-5201)
		담당자	과 장	김슬기	(sk.kim@kita.or.kr)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	책임자	팀 장	박용민	(02-3771-0442)
		담당자	책 임	한 호	(hanpodosa@fki.or.kr)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책임자	실 장	이민경	(02-2124-3110)
		담당자	부부장	이영섭	(subs@kbiz.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	책임자	팀 장	이승용	(02-3270-7353)
		담당자	책 임	이상정	(sangjung@kef.or.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추재욱	(02-3275-0106)
		담당자	선 임	박성진	(sjpark@fomek.or.kr)

- ◇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여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 역동성 제고 및 중장기 성장전략 논의

- ① **(운영방향)**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 **(참석)**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폭 넓게 참여
- **(주제)**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별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

※ 「성장전략 TF」 논의주제 예시

- ▶ (성장로드맵)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 ▶ (초혁신경제) AI 대전환, SIC 반도체, K-컨텐츠 등 One-stop 문제해결 지원
- ▶ (기업 활력 제고) 경제형별 합리화, 규제혁신, 투자애로 해소 등

- **(운영)** '경제형별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 운영
- 실무협의체 논의 중 이견이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성장전략 TF에서 심층 논의

- ② **(향후 계획)** 1차 TF(8.5)를 **경제 6단체**와 같이 개최하고 ❶관세협상
결과, ❷기업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경제형별 합리화 등 논의
- **(2차 이후)** 업종별 단체·기업 등과 함께 산업별 핵심규제 개선,
투자애로 등 논의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지원방안 마련

1. 한미 관세협상 타결(7.30) 주요 내용

- ☐ (관세)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관세 및 자동차관세를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232조 관세 품목에는 최혜국대우 약속
 - ☐ (금융패키지) 한국은 한·미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 조성 약속
 - 조선협력*("MASGA 프로젝트") 1,500억불, 이외 2,000억불은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
 - ☐ (구매) 한국은 트럼프 임기내 미국산 에너지 1,000억불 구매 약속
 - ☐ (비관세장벽)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및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 약속
- * 미국내 조선소 신설, 인력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 등
- *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

2. 평가 및 의의

- ☐ 상호관세 유예 종료(8.1.)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對美 수출 관세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미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 유지
- ☐ 對美 금융패키지는 후속협약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양국간 경제협력 심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기여 전망

3. 향후 계획

- ☐ (수출 지원)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 지원
- ☐ (국내 대책)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 강화

1. 기업규모별 제도 개선

- ①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
 -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투자, 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
 -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기준·방식 다양화
- ②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
 - 다른 법률에서 기업규모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원용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취지에 맞게 규제기준 변경 등 종합 검토

2. 경제형벌 합리화

- 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
- ②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
 -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 완화 또는 면책규정 신설 추진
 - 과징금 전환(+상향), 先행정제재-後형벌 전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형벌규정 합리화
- ③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 강화**

⇒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마련